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기업·대학의 역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기업·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01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2001년 6월 28일부터 3일간 제주 롯데 호텔에서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행사 개요

세미나 첫날인 6월 28일(목)에는 이기준 회장의 인사말과, 한국무역협회 회장인 김재철 회장(동원그룹)의 “지식정보화 시대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주제발표, 그리고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강연과 총장들과의 대화가 있었다.

세미나 둘째날인 29일(목)에는 대교협 산하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국립대학 종합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어 대학의 발

전 과제를 3개 분과로 나누어 논의했으며, “대학교육과정 개혁”에 대해서는 연세대 김우식 총장이, “산학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창원대 이수오 총장이, “대학재정의 효율화 및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배재대 박강수 총장이 각각 발제하였으며,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간 대학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세미나 마지막 날 30일(토)에는 세미나 기간 동안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고, 대교협 사업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 주제 발표 요지

<주제 1> 지식정보화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김 재 철 | 한국무역협회, 동원그룹 회장

- 급변하는 경영환경 : 최근 기업에게 복잡하고 빠른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써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구조변화와 극복해 나가야할 과제임.
- 인적자원의 중요성 : 지식과 정보가 경제활동의 주된 자원이 되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결정짓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인사팀이라는 조직을 두고 인력을 관리했으나, 이제는 대부분이 인력개발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단순히 종업원을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 즉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데 인사업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학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배출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과 경제 또 우리 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므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기업의 희망은 대학교육에 있음.
- 인재 수급의 불일치 : 가장 큰 문제는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력자원이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미스매치가 된다는 점이며, 그 단적인 예로 IT인력이다. 대학에서 IT관련 학과를 전공하더라도 실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가량 교육을 따로 시켜야 함. 무역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들이 실무를 새로 가르치고 있음.
- 미스매치가 생기는 더 큰 이유는 우리 대학이 '기초축적형' 교육과 연구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실무형', '문제해결형' 교육과 학습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때문임.

- 기업들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찾아내고 동료와 협력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과 문제해결형 교육을 기대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의 모든 대학이 기초축적형 교육과 연구에 주안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봄.
- 기업이 대학의 졸업생을 채용하면서 재 교육 부담까지 떠맡을 경우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게 마련임. 대학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야 함.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 기업에 따라 업종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인재를 바라는지에 대해 확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창의력과 국제화 능력 등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창의력, 또 이를 실행에 옮겨 도전해 볼 줄 아는 실천력이 기업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임.
- 국제화 능력이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환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과 역량을 갖추고 패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인재양성을 위한 각계의 역할 : 앞으로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기업이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함.
-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 특히 기업이 필요한 인재 육성 초점에 맞춰 거시적 목표와 제도를 재정립해야 함. 사회의 요구에 맞춰 학과를 폐지하거나 신설 등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대학은 우선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에 주안을 두어야 하며 대학별 기초학문 부문, 전문직업교육



부문의 차별화를 추진하되 후자에 속하는 대학은 실무형, 문제해결형 교육을 강화해야 함. 우리 대학들이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전문가를 교수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겸임교수, 초빙교수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정기간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에서 활동하고 반대로 대학교수가 산업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주제 2〉 남북간 대학교육 활성화 방안

박 재 규 | 전 통일부장관

- 남북간 화해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간 교류못지 않게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데, 대학교육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동안 대학차원의 남북간 협력은 1989년부터 2000년 말까지 약 180건이 이루어짐. 이때의 협력은 주로 학술교류 활동으로 이중 1/3에 해당되는 68건이 국민의 정부 이후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짐.
- '98년 이후에 이루어진 대학차원의 협력은 학술교류 외에 대학간 협력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균관대, 강원대, 경남대, 연세대(연세의료원), 고려대 등이 북한 대학과 교류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중 일부는 협력관계에 합의하기도 하였음.
- 2001년 4월에는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 및 연변과학기술대학이 북한의 교육성과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5월에는 포항공대가 북한평양정보센터와 정보기술합의서를 체결함.
-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부기술분야, 의료분야, 생명과학분야, 기상 및 대기환경분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간 대학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짐.
- 남북간 대학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 남



북한 교육의 차이성을 인정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②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교류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현재 북한이 정보기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③ 세계사적 전환기에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훗날 이루어질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여 통합교육의 목표와 이념의 추구라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의 협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봄.

〈분과토의 I〉 대학교육과정 개선

김 우 식 | 연세대총장

- 연세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하에 실질적 대학 교육과정의 개선 내용중 먼저 기초교육의 강화와 학사지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부대학을 설립하였음. 이는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라 신입생들의 전공 결정 전까지 효율적인 교과과정 관리 및 학사 지도를 위한 것으로서, Academic Advisor 제도를 도입하였음.
- 2000학년도부터 교과목을 학부대학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교양교육체계의 전면 개편을 시도하였음.
- 다양한 학문습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선수과목 제도의 폐지 및 이중, 다중 전공의 활성화, 연계 전공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전공 선택의 자율성과 전공 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정원제한이 없는 연계전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음.
- 전공교육의 내실화는 연세대 교육과정 개선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교수의 주당 책임시간과 졸업이수 학점의 하향 조정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결국 교육과 연구, 해당 전공의 내실화를 위한 개편이라 하겠음.
- 세계화·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해 사이버 강좌개설,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 교육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걸맞은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전문인 양성을 위해 교육 개발센터를 설립했음.

- 학생 중심 교육 및 학사관리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예비수강신청제도, 성적사전예고제, 성적상대평가제, 조기졸업제, 졸업희망제, 강의평가, 수업계획서 사전 제출 등을 하고 있음
- 기초 학문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학문분야 소속 교수들에게 연구비 배정시 우대, 수강과목 폐가기준 완화, 기초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음.

〈분과토의 II〉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

이 수 오 | 창원대 총장

- 산·학·연 협력은 산업계, 대학, 연구소가 서로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의미하며, 이는 인적, 물질 및 계반 가용 자원을 교육과 연구 등에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하는 유기적인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 정부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 부처간에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사업이 있음. 지자체간에 예산 따오기 경쟁을 벌이는 관계로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 산업체의 문제점 : 일부 산업체에서는 아직도 산업체가 일방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그러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을 대학에서 공급해 주길 원한다면 투자에 인색하지 말고 주문식 교육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습자의 현장 실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실습 장소의 개방이 요구됨.
- 연구소의 문제점 : 연구원들이 더 많은 과제를 수탁하기 위하여 대학간의 공동 연구는 활성화되는 반면, 연구원 자체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장기적으로는 국가 기술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학의 문제점 : 산·학·연 협력이 아직까지 이공계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으며, 모든 학문분야에서 폐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학습자들은 대학 진학을 취업 준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직업 교육을 4년제 대학에도 도입할 필요성 있음.
- 대학의 정체성 확립 : 대학별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체성의 확립과 산·학·연 협력도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책무와 연계하여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교육의 방향전환 :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우수한 연구 결과를 창출해 내는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여야 그 진가를 발휘함. 이를 위해 교수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며, 대학의 생산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 :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기능 중심으로 변환하고 직업 교육, 주문식 교육과정, 연계 전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추구하여야 함.
- 대학내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구성 :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된 산학협력 프로그램별을 효과적인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학교기업의 설립 : 정부에서는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각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분과토의Ⅲ〉 대학재정의 효율화 및 확보방안

박 강 수 | 배제대 총장

-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재정 확보임. 그런데 현재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음(GDP대비 대학지원비율은 0.43%로 OECD평균 1.0%의 절반 수준임).
- 대학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재정확충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수익용 또는 교육용 부지에 산업체 연구소를 유치하여 대학과 기업이 합동으로 운영함. 이 때 정부는 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기업에 대해 세계상의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산학협력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대학교육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1/7수준에 불과한 우리의 등록금은 상향조정해야 하며, 등록금의 책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봄.
-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사립대학의 80%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여유 재원을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대여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사학재단이 대학에 전입하는 전입금 비율이 현재 4.8%에 불과한데, 이를 일본의 경우처럼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

는 저수익성 유희자산을 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대학운영의 효율화도 교육재정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안이며 현재의 백화점식 운영을 타파하여 대학간 통합이나 학과 또는 학부수준의 빅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방의 군소 국립대를 인근의 종합대학교의 분교체제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학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사무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고, 예산편성을 '전년도 기준'에서 '제로 베이스'로 전환해야 할 것임.
- 교육원가 개념에 의한 단위교육비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하며, 예산집행에서 자율성과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책임 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일류기업 명퇴자와 현역 기업인들을 교육기획자문단으로 활용하는 등 경영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분담하여 국립대는 비인기 기초학문과 기초과학분야를 사립대학은 사회에서 인기있는 응용학문과 공학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임. **필필**

